

러시아의 對北 접근 동향 분석

정은숙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994년 이래 러시아는 건국 초 얼마간의 서울 편향적 한반도 정책을 수정하고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목표로 북한과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 관계·정계의 고위급 대표단의 평양 방문이 줄을 잇고 있으며 과학·기술·문화 차원에서 협력이 새롭게 다져지고 있다. 러시아의 정책 수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러 관계의 악화로 실질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북한에의 지렛대를 발판으로 하였던 러시아의 對한반도 영향력이 상실되었다. 둘째, 북한의 생존력이나 한국 정치 엘리트의 통일 우려 추세 등으로 보아 한반도 통일이 상당 시일을 요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유연하게 독자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한 엘친 제2기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과의 접근을 통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엘친의 건강 악화로 후계자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으나, 누가 후임자가 되는 러시아의 대북 접근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적어도 건국 초 2년간 서울 편향적 정책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안보 측면에서나 러시아의 국익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 외교 정책이 노선으로나 주요 인물로나 건국 초와 달리 전반적인 보수화 성향을 띠고 있다. 비단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도 이미 러시아는 1993년부터 친서방 외교 노선을 지양하면서 실리적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있었다. 러시아 외교 노선상 친서방주의가 수세적 위치에 있는 상황은 자연 러시아의 북한 접근에 유리할 것이다. 물론, 러시아의 북한 접근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서울과의 선린 관계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라도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피해야 한다.

끝으로 러시아의 북한 접근 정책은 조소조약 폐기 후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조약의 강구, 러시아 무기의 북한 유입 가능성, 북한의 對蘇 채무, KEDO의 러시아 경수로 선정 불가능성, 그리고 최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안한 4차회담 등 몇가지 현안을 안고 있다.

보 리스 엘친이 지난 6월(1차 투표)과 7월(결선 투표) 민주러시아가 독립한 이후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었다. 겐나디 유가노프 공산당 당수와의 팽팽했던 접전을 생각할 때 서방의 깊은 안도감을 이해할 만하다. 적어도 러시아로부터 오는 의도적 안보 위협은 없으리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도 '구소련 부활'의 공포를 안겨준 유가노프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의 기존 정책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결선 투표 결과 발표와 함께 즉각 엘친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다. 과연 '지속적 개혁'을 외쳐온 엘친의 외교 정책을 낙관해도 좋은 것인지.

본 고에서는 제2기 엘친 대통령 임기(1996~2000년)를 맞아 지난 2년여 새롭게 부각되어온 러시아의 북한 접근 동향을 분석· 전망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지난 1994년, 전임 미국 대통령 카터의 평양 방문과 북미 제네바 핵합의를 전후하여, 건국 초 2년여

(1992~93년) 펼쳐온 서울 편향적 한반도 정책을 지양하면서 고르바초프 이래 악화 일로에 있던 북한과의 관계 재건을 모색하여왔다. 이에 러시아 국내 정치의 보수화와 반서방주의의 대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건국 초의 서울 편향적 한반도 정책을 심도있게 재평가한 결과, 이것이 정치·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의 국익에 득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북러 관계의 변천

민주러시아 이전, 모스크바의 북한 정책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각기 주권 국가로서의 건국을 선포하였던 1948년부터 1990년의 한·구소련 수교가 있기까지 근 40년, 모스크바의 한반도 정책은 전세계적 제국주의와의 투쟁 인식에 근간하였다. 구소련은 한반도에서 북한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으며, 양국 관계는 그 기복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배경으로 하였다.

마침내 1985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 정책'의 여파는 구소련의 한반도 정책에도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이전 '하나의 조선 정책'이 '두 개의 한국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1988년 역내 군사력 감축과 협력 안보를 제창한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 구소련 선수단의 서울 올림픽 참가, 1990년 봄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고르바초프 한·구소련 정상회담의 만남, 마침내 9월의 한·구소련 수교는 북한으로 하여금 구소련에 대해 놀라움과 배신감을 갖게 한 사건들이었다. 한·구소련 수교 당시 로동신문은 "딸라로 사고파는 외교"라는 제하에서 "쏘련이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리익과 신의를 23억 딸라에 팔아먹은 것"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한·구소련 수교를 "미국, 쏘련, 남조선의 삼각 결탁 관계의 형성"으로 못박았다.¹⁾

이렇듯 급격한 구소련의 한반도 정책 변화는 곧 1991년 9월 북한으로 하여금 UN 동시 가입을 결정토록 하는 데에 주요 요인이 되었다. 마침내 1991년 12월 8일 구소련 붕괴에 대한 공식 선언 닷새 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남북한 상호협정'에, 그리고 2주 후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에 각각 서명하였다. 북한으로서는 막상 구소련·동구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편성되는 마당에 비록 전략적 차원이었을지 모르나 이에 적응해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구소련 붕괴 전, 1991년 8월 보수 세력에 의한 불발 쿠데타 진압 후, 사실상 구소련 외교 정책에서 북한

1) 「로동신문」, 1990. 10.5.

은 실존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중요성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러시아 건국 초(1992~93년), 심화되는 북러 관계의 악화 현상

1991년 12월, 구소련이 공식 붕괴되고 모스크바의 주요한 정책 결정권이 반공주의자들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러시아는 더이상 북한과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더욱이 국가의 경제력이 국력의 기초가 되는 냉전 이후, 국제 질서에서 북한 경제가 붕괴 일보 직전의 초라한 모습으로 비추어진 것이다.

1992년 11월 옐친의 서울 방문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 정부를 북한이 아닌 남한으로 전환했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서울 편향적 정책을 상징하였다. 무엇보다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이 아닌 한국을 첫 공식 방문하여 '기본관계조약'을 채택했다는 사실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옐친은 북한과 관련하여 첫째, 구소련의 유산으로 물려 받은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61년 체결)을 폐기 혹은 상당 정도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에 군사 원조를 중단할 것이며, 대신 한국과 군사·기술 부문에서의 협력을 도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등의 자극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옐친은 서울 체류 동안 러시아가 이념적으로 북한과 병립하기 어려운 국가가 되었음을

여러 국면에서 시사하였다. 예컨대, 한러 기본관계조약은 양국이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 '시장 경제' 등의 신념을 공유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옐친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자신의 반공 의지를 분명히 밝혀 남북 대치 상태의 한반도에서 분명 남한의 손을 들어주는 외교를 펼쳤다.

공산주의는 러시아에 있어서 명백한 허위, 민중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체제였으며 인간의 인격과 특성을 왜곡시켜온 제도입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버렸습니다. ...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며 효율적인 시장경제 체제와 진정한 민주제도 하에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정부를 구축하려 합니다. ... 민주러시아는 두 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세계를 분리시키고 냉전을 초래했던 스탈린의 논리를 완강히 거부합니다.²⁾

설상가상 IAEA와 핵사찰 문제로 옥신각신 해오던 북한이 1993년 3월 NPT 탈퇴 의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는 주저없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동참을 표시하였다. 1993년 4월, 옐친과 클린턴의 벤쿠버 정상회담에서는 특별히 북한의 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 합동연설문에서 이들은 "북한 지도자 김일성은 국제적으로 승

2) *Rossiskaya gazeta*, 1994. 11.21.

인된 핵안전 원칙을 존중할 것”, “북한은 여전히 IAEA 사찰 의무가 있으니 이를 전면 수용할 것”,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할 것” 등을 강력히 제의하였다.³⁾ 이외에도 러시아는 UN 등 여러 통로를 통해 국제 사회의 對북한 압력에 주저함이 없었다. 물론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도 북한핵 러시아 정부에게 북한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요청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NPT 탈퇴 의사 선언 이전부터 IAEA의 요청을 받아들여도록 권고하여 왔다. 일찍이 1992년 1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이고르 로가초프는 북한의 핵안전 협정 서명 거부에 유감을 표명하며, 국제 사회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북러간 정치·경제·기타 분야 협력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다시 영변의 두 시설물과 관련, IAEA와 설왕설래하던 1993년 1월, 러시아 외무차관(현재 주한 러시아 대사) 쿠나제는 옐친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에 건너가 IAEA 사찰과 남북 상호 사찰을 통해 의혹을 불신시키고 국제 사회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러시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결의했을 때, 옐친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핵분야 전문가들의 소환은 물론 기술 교육의 중단을 실시하였다. 기타 원자력 플랜트 건설의 협력도 중단되었으며, 일찍이

구소련의 도움으로 발판으로 완성된 8MW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봉 연료의 수송도 중단되었다.⁴⁾

북한핵 문제가 위기로 치달던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의 방러 중에는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서울·모스크바 관계 고양을 선언하는 한러합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나아가 한반도 분쟁시 러시아의 북한 지원을 명기한 ‘소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를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의 건국 초, 친서방 외교 노선과 궤를 같이했던 한러 관계의 급진전은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자연 이미 고그바초프 말기부터 악화되어왔던 북러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북한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적대적’ 세력이라며 더이상 러시아와 어떤 의미의 협력도 하려들지 않았다. 그들은怨聲을 아끼지 않았다. “구소련의 합법적 승계국으로서 CIS 국가내 핵문제도 처리를 못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주제”에 “미국의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북한의 적대 세력들이 행사하는 범죄적 압력”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이다.⁵⁾ 북한은 향후

3) Korea Herald, 1993. 4. 6.

4) 정은숙, 「러시아의 북한핵 관련 정책: 지역역할론의 대두와 균형 정책 추구」, 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4-01 참조.

러시아가 핵분재와 관련하여 압력을 계속할 경우, 사할린-북한-남한을 잇는 가스 파이프 라인 구축 프로젝트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⁵⁾

1994년 이래, 러시아의 북한 접근 가시화

이상과 같이 전국 초 서울로 급경사되었던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1994년 9월, 옐친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 외무차관 파노프(전임 주한대사)가 평양을 방문한 이래 북한 접근을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인상을 주고 있다. 파노프는 북한 관리와의 면담에서 러시아는 북한과 건설적 관계 증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옐친의 전갈을 김정일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김일성 사후, 러시아가 즉각 김정일 정권에게 정통성이라는 도장을 찍어준 셈이다. 파노프에 의하면 북한도 이념적·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 도모, 정치적 대화의 증진, 그리고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이해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1995년 초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국 국장인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는 이인규 외무차관 등 북한 관리들을 면담하고 돌아와 “양측 모두 접촉과 대화를 강화할 것을 원하며 구체적 협력 문제를 고려하고 있

다”고 하였다. 북한 홍성남 부수상은 그간 북러 관계 악화는 모스크바의 일방적 책임인 만큼 앞으로 북러 관계 재건을 위해 러시아가 애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우정의 표시로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러시아에의 지지를 밝혔다.⁷⁾ 이외에도 1995년, 자민당 당수 지리노브스키를 위시한 러시아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이 있었으며 북러간 어업과 산림에 관한 협력을 포함한 양국간 여러 협정들이 복원 혹은 새로 서명되었다.⁸⁾

1996년 4월에는 근래 러시아가 북한에 파견한 정부 대표단 가운데 가장 고위급인 비탈리 이그나텐코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옐친의 구두 메시지를 들고 방북, 경제·기술·문화 부문에서 양국 관계의 복원을 시도한 바 있다. 때 맞추어 체르노미르딘 총리도 강성산 북한 총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난 몇년간 양국 경제 관계가 위축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양국 관계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대화의 재개와 교류 확대의 뜻은 같은 달, 파노프와 이인규간 양국 외무차관 회담에서 재확인되었다. 5월 말에는 켄나디 셀레즈노프 러시아 하원의장과 두마대표단이 방북, 북한과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구소련이 건설한

5) Yevgeny Aleksandrov, *Pravda*, 1993. 5.7. 참조.

6) Vladimir Slosyrev, *Izvestiya*, 1993. 5.20.

7) 파노프와 아파나시예프의 방북에 관해서는 Alexander Zhebin, “Russia and Korean Unification,” *Asian Perspective*, Vol.19, No.2, Fall-Winter 1995, p. 179 참조.

8) *Sevodnya*, 1995. 3.11.

북한내 공장 재가동 문제, 북한의 對러시아 외채(구소련시 30억 경화루블) 일부 감면 등이 논의되었다. 대선 이후 최근 러시아는 북한에 20만 달러에 해당되는 식품 원조를 약속한 바 있다.

요컨대, 건국 초 장미빛이었던 한러 관계가 서먹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거의 맥이 끊기 다시피했던 북러 관계가 1994년 중반 이후 회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접근으로의 선회, 배경과 원인

민주러시아 독립 초기의 對한반도 정책이 왜 1994년 이래 전환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의 변화는 지속적인 실행과 실행 결과를 통한 학습이 반복되면서 도출된다. 러시아의 대북 접근은 크게 보아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동기를 구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러시아는 미국·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충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미한 존재로 전락하였음을 깨달은 것이고, 둘째는 경제적으로도 북한과의 교류 단절은 직간접적으로 러시아의 국익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실리 추구의 차원에서 건국 초 2년간 러시아의 親서울 疎평양 불균형적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 균형감을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모스크바 외교가에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를 전후하여 속출하였던 것이다. 지리하게 2년여를 끌어온 북한의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소외감, 북러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곧 붕괴되리라 보았던 북한 정권의 생존력과 한반도 통일의 지연 가능성, 러시아 외교 정책의 전반적 보수화 등이 새롭게 전개되는 러시아의 북한 접근에 대한 총체적 설명이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타결 과정에서의 '부당한' 소외감

물론,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자국의 국익이라 보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국의 북한핵에 관한 '무분별한' 공조 체제, 이로 인한 북러 관계의 악화는 북한 핵문제, 한반도 정세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한편, 러시아를 부차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았음을 인식하였다. 러시아의 IMEMO(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의 블라디미르 이바노프 박사는 실증적으로 러시아의 소외감을 예시하였다. 1994년 2월 백악관 미일 정상 기자회견에서 클린턴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한번도 거론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구소련 말인 1991년 10월 미국 국무성에 발표한 총 65면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구소련이 무려 70 번이나 거론되었던 것과 심히 대조된다는 것이다.⁹⁾

구체적으로 북한핵 문제를 둘러싸고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러시아는 자국이 부당하게 소외되고 있다고 본다. 첫째, 분명 러시아 극동 지방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국가이다. 1994년 초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이 구소련 지역이 러시아의 이해 지대임을 선언하는 소위 먼로주의(Monre Doctrine)를 선언한 바 있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친서방 성향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진 당시 코지레프 외무장관조차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한반도도 러시아의 근외 이해 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⁹⁾ 이러한 이해 지역 인식론으로 보아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얼마 후 있었던 미국내 대북제재론은 얼마든지 러시아 극동 지방을 분쟁과 불안정으로 몰아 넣으려는 의도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994년 4월 한국 한승주 외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직접적 참여가 배제된 어떠한 북한핵 관련 조치에도 따를 수 없음을 밝혔다.¹⁰⁾

둘째, 러시아는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이후 핵위기 타결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 양국간 문제로 전환된 데 대한 대안으로 핵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보다 포괄적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8者(남한, 북한,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UN, IAEA)회의를 제안하였다. 옐친 대통령도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 방러시 그러한 회의 소집 전에 대북 제재를 논하는 것은 미숙한 일임을 지적하였다.¹¹⁾ 따라서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합의에 대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핵위기 타결이란 점에서는 지지하면서도, 러시아의 제안이 주변국들로부터 수용되지 않은 사실, 나아가 러시아가 배제된 사실에 대해서는 석연함을 감출 수 없었다. 러시아내 보수파들은 북미 제네바합의는 러시아 역사에 전례없는 심대한 착오라며 동북야로의 출구는 이제 봉쇄당한 것이라 성토했다.¹²⁾

셋째, 북한핵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하강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외교는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은 1992년 10월,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큰 마찰없이 쌍무 관계를 유지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핵 위기시 UN안보리 성명이 완곡하게 표명될 수 있도록 대서방 견제 역할까지 하였던 것이다.¹³⁾ 결과적으

9) Defense Intelligence Agency, Washington D.C., *North Korea: The Foundations for Military Strength*, October 1991. Vladimir I. Ivanov, "Korean Bomb, the United Nations, and Russia,"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국제학술 세미나, 1994년 6월에서 예증.

10) *Izvestiya*, 1994. 6.18.

11) *Izvestiya*, 1994. 6.4.

12) 위의 신문.

13) *Pravda*, 1994. 11.16.

로 북러 관계의 악화로 중국만이 북한의 정치적 우방으로 남아 북한 정책에 지렛대를 갖게 된 것이다. 이는 韓中 무역 중대에도 불구하고 北中 경제 관계가 여전히 UN의 대북한 경제 제재의 주요 관건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러시아내 비판자들은 러시아가 신중치 못하게 무조건적으로 국제 사회에서나 쌍무 관계에서나 북한 압력에 동참해온 것과 달리, 중국은 독립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단기적으로는 자국 안보에, 장기적으로는 자국의 한반도 영향력에 부정적 결과를 줄까 우려하며 공평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북러 관계의 악화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선두 협상 주자가 미국으로 기정 사실화된 것도 이들은 간과하지 않고 있다.¹⁴⁾ 세계의 주목 속에 수시로 진행되는 북미 회담을 지켜보면서 러시아는 80년대부터 북한핵 개발의 위협을 구소련에 경고한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정작 그 미국이 국무성 차관보 갈루치를 중심으로 신축성 있게 북한과 타협을 벌이고 있음을 격세지감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는 정작 자국이 1985년 구소련 시절, 북한과 경수로

협정을 체결하여 1990년까지 부지 선정 작업 등에 동참까지 한 사실, 그러다가 북한의 NPT 조약 준수 거부로 러시아 정부가 동협정의 기능을 정지한 사실 등이 북한 핵문제 타결 과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음을 절감하였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자국이 무조건적으로 미국과 대북 공조체제에 들어가 북러 관계를 악화시킨 것이 전략적으로 옳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제적 손실의 가시화

북러 관계의 악화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보고 있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첫째, 북러 경제 관계 악화로 인한 직접적 손실이다.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티타렌코는 중단되다시피한 북러 무역으로 인해 러시아는 매년 3~4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한다.¹⁶⁾ 구체적으로 북러 경제 관계 회복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① 1993년까지 북한의 구소련에 채무 약 30억 달러는 무역 등 경제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서만 회수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소된 무역 규모를 1981년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② 북

14) Newsweek, 1994. 4.11. p. 18 참조.

15) 예: Oleg V. Davidov, "Russia's Position towards the North Korea's Development as a Nuclear Power," Il-yung Chung and Eunsook Chung eds. *Russia in the Far East and Pacific Region*,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4, pp. 377~388.

16) Mikhail L. Titarenko, "Rossiisko-koreiskiy otnosheniya: novye problemy i perspektivy,"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제101회 학술세미나, 1993년 5월.

한은 러시아의 기계류, 산업 설비 등을 수입하고, 수입 대금으로 러시아에 요긴한 철강, 농산물, 경공업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극소수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이 단절되어왔다. ③ 두만강 유역 나진·선봉지구 개발을 위해 러시아의 21개 기업들이 북한과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업이 좌절될 것이다. ④ 러시아의 수출입 물품 통과시 나진항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⑤ 목재 채취 등을 위해 러시아 극동 지방에 진출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용역이 단절될 것이다. ⑥ 두만강 유역 자유무역지대 프로젝트, 그리고 러시아를 시발로 북한을 거쳐 한국을 잇는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역시 치명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북한 접근 배경 가운데는 한러 경협이 기대만큼 원활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도 있다. 이들은 러시아내 외국 자본 유치에 위한 간접 자본과 법규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점보다는, 북러 관계 악화로 러시아가 북한에 발휘할 정치적 지렛대가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요인을 찾게 되었다. 물론 한·구소련 수교 당시 한국 정부가 구소련에 약정한 30억 달러 차관 지급의 중단도 러시아측의 이자 연체보다는 러시아의 내북 영향력 상실로 인한 대가로 본다. 즉, 러시아가 더이상 북한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북러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러시아

가 1992~93년 '자발적으로' 선언하여온 결과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기대밖 생존력

러시아 건국 초 반공주의, 민주 운동의 열기 속에서 러시아 정치인들은 북한도 동유럽 국가들처럼 조만간 붕괴될 것을 의심치 않았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문제도 그다지 오래 끌 것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 정권이 주요 동맹 세력들이 소멸된 상태에서 미국을 상대로 핵위기를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물고가는 것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도 상당 정도 시간을 요할 것이라 보게 되었고, 자연 북한을 무시·간과하였던 종전의 정책에 수정을 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1994년 6월의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의 방북, 10월 북미 제네바합의 등은 분명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남북 등거리, 균형 추구 외교로 선회하는 전기를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러시아 외교의 전반적 보수 선회

러시아가 실리 추구를 위해 북한을 접근하기로 한 데에는, 1993년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러시아 국내 여론이 보수화되면서 친서방 외교 정책 노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분위기의 탓도 있을 것이다. 이는 1993년 12월 러시아 제1대 두마선거에서 극단의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지리노브스키의 러시아 자민당이 당 득표율 1위를 기록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연금 상태를 변하고 갖 등장한 공산당도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어 결과적으로 옐친이 1993년 10월 강제 해산했던 舊소비에트보다도 보수적 국회가 구성되었다.

북러 관계 현안

러시아의 북한 접근 정책은 다음과 같은 현안을 안고 있다. 첫째, 새로운 양국 기본 관계 조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1961년 7월 서명된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은 조인 후 10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일방이 1년 전에 폐기를 표명하지 않는 한, 5년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러시아가 1995년 이의 폐기를 북한에 통고한 결과, 1996년 7월로 공식 폐기된 상태이다. 同조약은 기본적으로 냉전시대의 군사 조약이기 때문에, 탈냉전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우호 조약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새로운 조약의 초안을 작성,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이다. 1992년 옐친의 방한시 한국 정부와의 약속대로 러

시아의 공격형 무기 지원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그러나 러시아 군수 산업의 민수 전환 문제가 생각처럼 수월치 않은 데다, 동유럽 구소련군 철수, 군사 개혁,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CFE) 협약에 따른 무기의 우랄 동쪽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한 잉여 군장비를 감안할 때, 러시아의 대북 무기 지원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구소련제 장비를 소지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신예 무기의 부품과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미사일 및 함정 등의 전자 특수 부품을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는 북한을 그들의 군사 영향권 내에 계속 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국익은 물론, 정치·안보적으로도 국익이라고 보고 있다.

셋째, 북미 핵합의 결과로 탄생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계속하여 자국형 경수로의 도입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러간 군사·기술적 협력의 성행, 북한의 對蘇 채무 30억 달러 결제의 필요성, 러시아제 경수로의 저렴성 등을 들어 러시아가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파노프 외무차관이 한국형 경수로 채택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이

17) 연현식, "러시아의 북한 접근 동향 분석", 「주간국방논단」 제568호, 1995. 2.6; 정은숙, 「냉전 이후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 수출」, 세종연구소 연구논문 95-05 참조.

후, 러시아 정부 관련자들은 지속적으로 자국 경수로의 판매를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냉전 이후, 에너지 발전 시장 경쟁을 의식, 경수로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 확보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KEDO의 창설 과정에도, 그리고 경수로 선정을 위시, 북한 핵프로그램 재구축 전과정에서 어떠한 주요 역할도 요청받지 못한 데 대해, 러시아내 주요 신문들은 심지어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경제적 이해를 위해 핵문제를 사전에 조작했다는 비난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러시아·이란간 핵에너지 협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중 잣대가 아닌가 묻고 있다. 예컨대, 1995년 초 미국을 방문한 러시아 두마대표단의 아 버체프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의 경수로 공급을 당연시 하는 미국이 왜 러시아의 對이란 경수로 판매를 봉쇄하는가” 항변하기도 하였다.¹⁸⁾

넷째, 1996년 4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안한 4者(남한, 북한, 미국, 중국)회담은, 또다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에 안겨준 충격적 조치였다. 향후 북러간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러시아 주요 일간지에는 한미의 계획을 무조건 지지하라는 요

구는 ‘서울 스타일의 동반자 정신’이라며 실랄한 논평이 실렸었다.¹⁹⁾ 5월,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의회대표단은 이 구도에서 러시아가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²⁰⁾ 공로명 한국 외무장관의 방러시 4者회담에 강력 반대를 표명한 프리마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7월 자카르타의 ARF(아시아 지역안보포럼)에서 러시아는 자국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동북아 안보 대화의 경우에만 건설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²¹⁾

전망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한, 열친 제2기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과의 접근을 통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열친의 건강 악화설로 후계자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으나, 누가 후임자가 되는 러시아의 대북 접근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적어도 건국 초 2년간 서울 편향적 정책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안보 측면에서도 러시아의 국익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러시아 외교 정책이 전반적으로 보수화되어 왔다. 비단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도 이미 러시아는 1993년부터 친서

19) *Nezavisimaya gazeta*, 1996. 5.23.

20) 「조선일보」, 1996. 6.4.

21) 「동아일보」, 1996. 7.23.

18) *Izvestiya*, 1995. 2.15.

방 외교 노선을 지양하면서 실리적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있었다. 금번 대선에서도 사실 우파 민주 개혁 인사로 분리되는 그리고리야 블린스키 후보를 제외하면, 옐친을 포함한 모든 후보가 사실 상의 러시아 애국주의와 서방 정서를 반영한 '강력한 러시아'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NATO의 동진, 對세르비아 제재, 러시아·이란간 핵협력에 대한 미국의 반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천연 자원 점유 문제 등 대선 이전에 러시아와 서방간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었던 쟁점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1996년 1월 옐친에 의해 새로 임명된 프리마코프 외무장관은 대선 기간 중 냉전 이후 국제 질서 속에서 패권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은근히 미국을 꼬집는 한편, 러시아가 무조건적으로 서방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을 공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옐친이 결선 투표에서의 승리를 다지기 위해 부총리급인 국가안보위원회 서기로 영입한 레베드 전임 장군도 이미 서방 문화의 무절제한 유입을 막기 위해 여행사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자는 등의 발언을 통해 對서방 강경 노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지난해 말 치른 제2대 국가두마 선거에서 총의석 450 석 가운데 157 석을 공산당이 차지하여 원내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쥬가노프가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는 하였지만, 국가두마내 제

1당의 당수로서 그와 그의 당 영향력은 얼마든지 입헌 테두리 내에서도 향후 러시아 정국의 향방에 중대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 외교 노선상 친서방주의가 수세적 입장에 있는 상황은 자연 러시아의 북한 접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물론, 러시아의 북한 접근이 무절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서울과의 선린 관계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러 경협에 장애가 되어오던 러시아의 부채 상환 문제가 1995년 7월 양국간 채무 우선 변제분에 대한 현물 상환 약정으로 어느 정도 풀려가고 있고, 러시아내 투자 여건이 성숙해지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 자세로 경협에 임할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분쟁이 재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러시아가 현재 국내 문제에 여념이 없기도 하거니와 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의 직접적 개입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統**